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1156
----------	------

제출연월일: 2017. 10.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확대하고 청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청년의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기본이념·정의·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 ~ 제5조)
- 나.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청년 정책연구(안 제6조 ~ 제7조)
- 다. 청년정책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규정(안 제8조 ~ 제11조)
- 라.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금융생활 지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문화체육활동 강화, 병역의무이행 지원, 권리보호 등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근거 마련(안 제12조 ~ 제21조)
- 마. 청년 시설의 설치·운영(안 제22조 ~ 제23조)
- 바.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행정·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안 제24조 ~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서울특
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7. 8. 31. ~ 2017. 9.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확대하고 청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청년의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
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
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 금융 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의 체육활동 강화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명은 구청장으로 정하고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제, 주택, 복지, 문화 등 청년정책 업무관련 부서의 장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단, 이 경우 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구청장은 교육·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생활안정)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문화체육활동 강화) ① 구청장은 청년의 건전한 문화생활 향상과 체력 증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이 문화체육활동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시설의 이용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
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
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

른 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0조(청년의 병역의무이행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의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지원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⑤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3조(수탁기관 등) ① 수탁기관은 청년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

제24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5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1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 노인청소년과 김명선 (2286-5481)

< 관 계 법 규 >

□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6.4., 2016.5.29.>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일 : 2013.11.25)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문화·도서관·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교육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근로자복지, 자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2.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3. 위탁기간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수탁 사실을 성동구보 및 성동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6.21.>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7.12., 2017.7.26.>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

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2017.7.26.>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2013.6.21., 2016.7.12.>[전문개정 2009.4.24.]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서울특별시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제4호의 보조대상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5.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11. 1.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10. 19. /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2017. 10. 20.

다. 상정일자: 2017. 10. 31.

(제234회 임시회 개최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주민생활국장

나. 제안이유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확대하고 청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청년의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기본이념·정의·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 ~ 제5조)

나.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청년 정책연구(안 제6조 ~ 제7조)

다. 청년정책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규정(안 제8조 ~ 제11조)

라.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금융생활 지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문화체육활동 강화, 병역의무이행 지원, 권리보호 등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근거 마련

(안 제12조 ~ 제21조)

마. 청년 시설의 설치·운영(안 제22조 ~ 제23조)

바.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행정·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안 제24조 ~ 제2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7. 8. 31. ~ 2017. 9.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현안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5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 제3조에서는

- 본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안 제6조 ~ 제7조에서는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 ~ 제11조에서는

-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12조 ~ 제21조에서는

- 청년에 대한 구청장의 지원사업들을 명시하였고,

안 제22조 ~ 제23조에서는

-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24조 ~ 제25조에서는

-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지난 8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4%로 1년 전 보다 0.1% 상승하여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 10.7% 이후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을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 청년 중 18.9%는 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지 않거나 취업을 위한 교육도 받지 않는 일명 니트족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상당수는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로 고용 한파로 취업 의지를 상실한 청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 청년실업은 청년들의 노동의욕과 자존감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취업이 늦어지면서 결혼과 출산도 지연되어 고령화 사회 속의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함.

- 이러한 점에서 본 조례안은 국가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의 사회 참여와 고용 확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의 수립과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